

生態學的 危機管理 와 公共政策의 비전

安 基 熙

(本協會 研修部 教授)

- I. 序
- II. 生態學的 政策理論의 必要性
 - 1. 成長體制의 限界
 - 2. 生態學的 政策理論
- III. 生態學的 危機管理와 公共政策
 - 1. 人間 / 自然의 二元主義 영향
 - 2. 生態學的 危機管理와 公共政策
- VI. 保全과 開發의 統合戰略
 - 1. 組織上의 戰略
 - 2. 保全과 開發의 統合戰略
- V. 結 語

2. 生態學的 危機管理와 公共政策

최근 급격히 증대되는 生態學的 危機에 관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몇몇 앞서가는 나라들을 제외한 개발도상국가들은 成長이라는 집위에 環境 保全이라는 무거운 짐을 하나 더 지게 됨으로써 기존의 政治經濟體制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콜드웰에 의하면 環境汚染 및 破壞의 原因을 다음과 같은 세가지 유형으로 나누고 있다.

첫째, 기존 技術經濟體制의 정상적인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우발적, 사전적 環境문제이다. 인간의 부주의 내지 실패로 인하여 體制 外部에서 나타나는 단편적인 것이며, 이것은 公共政策의 결정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러한 유형의 環境문제라면 環境위기에 대한 경고, 교육, 環境정화캠페인, 각종의 제한을 통하여 대처할 수 있다.

예로서 각종 자동차에 공해방지장치의 부착, 국공립공원제도의 확충, 수질보전운동등을 벌려 된 개인 또는 기존의 관행 또는 관습에는 크게 간섭하지 않으려는 태도이다.

둘째, 환경문제는 기본적인 조직운영의 오류에서 비롯된다는 것이다. 즉, 환경오염 및 파괴는 조직의 목표와 사명이 불명료하고 운영절차의 불비, 기획의 실패에서 연유된다고 한다.

이러한 환경문제는 行政法令의 정비, 표준운영 절차의 설정, 정부 부처의 책임제적 부분개편 등으로 대응할 수 있다.

그 예로 국가의 최고이념에서 부터 人間과 環境間의 지속적인 調和를 추구하는 美國의 環境政策法(National Environmental Policy Act: NEPA); 환경문제의 복잡성, 다양성으로 個別的 部門의 접근을 떠나 전체적·종합적·시스템적 立法을 창출한 英國의 1974년의 環境汚染規制法(Control of Pollution Act 1974), 우리나라의 環境保全法 및 環境關係法令이다.

세째, 環境問題는 社會經濟體制 그 자체에 기인하는 것으로 社會的 태도와 가치 및 社會的 制度를 정상적으로 운영하더라도 필연적으로 회피할 수 없는 경우이다.

따라서 人間과 環境間의 관계는 단순한 경로나 권고, 행정적 규제 또는 司法的 통제로는 근본적으로 불충분하고 社會制度의 재검토와 政治經濟學體制(Political economic system)의 전환을 요청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공기와 물등의 환경요소를 가격개념으로 内部化한 環境經濟學 體制的 接近이 필요하다.

오늘날의 보수주의와 자유주의 등 정치이념의 양극화로 초월하여 環境의 質 보전 전략하의 均衡社會 또는 定常狀態의 社會로의 체제전환을 의미한다.

실제로 자연정복 사상에 기초를 둔 政治社會나, 이기주의와 공리주의 그리고 대량생산과 大量消費에 기반을 둔 美國등의 政治經濟體制는 아직까지는 成長을 前提로 한 自由放任主義의 시장 메카니즘 또는 經濟人(Economic man)의 개념으로 부터 크게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現體制下에서는 非經濟的·社會的·政治的 문제도 經濟的인 方法으로 해결하려는 추세가 압도적이다.

모든 문제의 해결을 契約에 의한 접근 방법으로 돈으로서 해결하려는 사고방식이다.

그러나 大氣나 水質汚染 등 환경문제를 단지 契約的 方法으로 해결할 수는 도저히 없다는 점에서 환경문제가 새로운 政治的 문제로 등장하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과도한 成長에 의하여 부족해진 次 環境要素 문제를 어떻게 배분할 것이며, 이러한 경우의 平等의 문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게 된다.

그러므로 오늘날 生態學의 危機와 관련된 社會的·政治的 問題는 시장적·경쟁적 메카니즘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다.

水質汚染問題를 예를들면 이해 관계자간의 갈등, 관계부처간의 협의, 정부의 기획 및 정책결정 등 문제를 지니며 기술적·법적·정치적·철학적 가치의 문제성을 띠게 된다.

보편적으로 水質管理體系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첫째, 水質管理에 관한 합리적인이고 종합적인 정책결정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

둘째, 水質管理政策은 당해기관 내부의 政策決定過程의 문제라기 보다 대부분이 기관 外部의 要素와 관련되었다는 점. 세째, 水質管理에 관한 公共政策決定에 있어서 갈등현상이 지나치게 심하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水質供給管理는 公共利益과 너무 밀접하여 특히 水資源이 부족할 때에는 그 配分問題가 실로 중대하여 진다. 그러나 관련 機關은 너무 많고 복잡하여 배분의 公平性, 우선순위의 책정등 효율적 관리는 매우 어렵다.

제도적으로 委員會 등을 설치하여 조정하게 되나 韓國의 委員會制度가 거의 형식적인 차원에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각 기관의 기득권을 중심으로 현상유지에 집착하려는 관성의 힘에 合法性을 고려한 合理的인 결정을 하기는 매우 어렵다. 또한 水質管理에 있어서는 기존체제의 자신들의 전문적 고정관념, 가치관, 편견등의 전통과 이념 때문에 開發과 保全의 調和點을 찾기란 매우 어렵다.

오펔즈(William Ophuls.)는 人類의 生態學的 危機管理를 위하여 기대되는 均衡社會 또는 定常狀態(Steady state)의 政治體制的 特성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① 個人主義는 지역주민의 共生主義로

② 정치이념도 지나친 自由放任 보다는 權威主義로 ③ 平等的 民主主義는 能力과 地位를 중시하는 啓導的 엘리트 주의로 ④ 成長志向의 경쟁적시장 메카니즘은 調和的 메카니즘으로

⑤ 전형적인 經濟人의 개념에서 탈피하고,

⑥ 文化的 규범은 보다 多様하며 ⑦ 에너지 기타 자원의 사용을 제한하고 ⑧ 필요한 政治的 德은 自制이며·中國의 봉건사회와 같은 社會가 生態學的으로 전전한 사회로 생각되며, ⑨ 功利的인 만족이 利益 또는 公益의 척도가 되어서는 안되며, ⑩ 老莊子의 道·無爲自然思想이 바람직하며 ⑪ 아시지의 聖 프란시스와 같이 人間外 非人間을 동등하게 사랑하는 자연만으로서의 전환이 바람직하다는 것 등이다.

오늘날 과도한 開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맑은 공기, 청정한 물, 푸른 숲 등의 환경요소는 시장 메카니즘을 통하여 공급될 수 없다. 따라서 政治的·社會심리학적인 요인이 작용하는 公共部門에 있는 公共財(Public goods)의 選擇理論은 非市場的 의사결정이론으로서 環境政策의 적절한 方法이 된다.

政治經濟學的인 측면에서 보면 公共組織의 목표는 公益의 실현이며 대기, 물 등의 公共財의 수요와 공급 또는 集合的 選擇이 生態學的 公共政策測定의 核心이 된다.

環境에 관한 公共政策은 종합적이고 포괄적이다.

제임스 부케넨(James Buchanan)은 環境問題 자체가 광범위하고 環境政策도 집단전체의 전체욕구를 집합적으로 상대하므로 下位體制間의 相互關聯性·불확실한 장래예측성, 한정된 수의 對案을 가진 계획의 한계성등 어려운 과제로 지닌다고 한다. 첫째, 個人的 次元에서 살펴보면 의사결정자의 상대적인 무식을 들 수 있다. 대체로 일반적인 경우에 의사결정자는 새

로운 環境의 變化에 대한 지식, 정보, 자료 등의 부족으로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또한 개개의 전문가는 自己分野이외의 타분야는 모르는 등 시야가 좁고 일반인은 광범한 지식은 있으나 특정 분야의 전문지식이 결여되어 흔히들 「배운 무식자」(The Learned ignorant)라는 모순을 지니고 있으며 그러므로 의사결정자는 오류를 범하기 마련이라는 점이다.

둘째, 제도적 차원에서는 公共財의 수요와 공급이 문제된다. 公共財의 配分은 共同消費, 結合供給 또는 外部經濟(External economy)를 특징으로 하며 集合的 選擇내지 公共選擇의 문제를 지닌다. 또한 環境問題와 관련하여 집단 또는 조직의 효율적인 강제와 公共選擇내지 社會的 選擇을 통한 環境汚染 排出賦課金, 環境稅, 汚染者 負擔金 문제등 集團的·共同體의 解決戰略이 필요불가결 하다.

環境政策은 政治體制的 動態的인 反應에 크게 의존하게 된다. 그러므로 經濟成長 못지 않게 環境保全이 우선적으로 중요하다는 國家의 확고한 政策意志의 전환은 지금 이 時點에서 매우 적절하다는 것이다. 즉, 開發途上國의 環境管理는 司法的 統制보다는 政治-政策-行政의 흐름에 더 의존하고 있다는 점이다.

環境에 관한 公共政策을 더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生態學的 위기를 고려하여 經濟開發과 똑 같은 차원에서 탄력적이고 기동성있는 環境機構의 개편, 보전우선의 효율적 관리패턴의 변화, 國家의 최고법인 憲法의 環境權 理念을 모든 開發에 앞서 事前에 環境影響評價를 立法化하고 制度化하는 國家環境政策의 宣言, 科學的 環境監視制度의 확충등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企圖·管理 및 통제가 요청된다.

IV. 保全과 開發의 統合戰略

최근 급격히 深化되어 가는 人類의 生態學的 危機를 극복하는 것은 어느 국가의 어떠한 政治體制를 불문하고 汎世界的인 최대 우선 과제가

아닐 수 없다.

環境危機管理을 위한 國家環境政策의 戰略方案을 提言하고자 한다.

1. 組織上의 戰略

歷史的 發展段階로 보아 최근의 경향을 生態學的 規制段階(Ecological control stage) 또는 體系適應段階(system oriented stage)라고 할 때 環境問題를 계속 종래처럼 위생문제로 다루려는 태도는 그 限界性을 들어 내어 적절하지 못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초기에 환경문제를 위생적으로 보았기 때문에 環境廳의 설치조차 保健社會部하에 두게 된 것 부터 잘못되면서, 현재는 기존의 “청”단위를 두고도 다시 委員會 조직을 개편하려는 것은 우리나라의 위원회 조직의 비활성화에 비추어 볼 때 계속 문제성을 표출할 가능성이 있다.

기민성과 탄력성을 요하는 환경관리에 위원회 조직은 부적합하다. 하루 빨리 “部”나 “處”의 단위로 개편함으로써 개발부처 국무위원회와 대등한 입장에서 환경문제가 논의되길 바란다. 지금까지의 성장체제의 관성의 힘이 환경문제에 얼마나 크게 작용했는지 재검토해야 할 시점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戰略의 目的은 保全을 위한 우선적 요건에 초점을 집중하고 합당한 조치를 취하며 대중의 인식을 촉구하는데 있어야 한다.

國家水準의 戰略은 政府機關의 保全組織과 民間組織의 保全業務를 조정하고 집중시키는데 있다.

광범한 環境問題解決에 國家와 地方自治團體가 전부 떠 맡아 일을 하려하기 보다 환경문제가 대부분 民間部門에 연류되었다는 사실에 입각하여 民間에 관련되는 일은 대폭 비정부조직에 이양함으로써 國民을 스스로 계몽하고 인식하는 방안이 매우 바람직하다.

2. 保全과 開發의 統合戰略

오늘날과 같은 大量生産과 大量消費活動을

유발하는 經濟成長體制는 과도한 廢棄物을 배출함으로써 生態系의 순환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그리고 開發(成長)과 保全은 先後의 문제라기 보다는 統合조정의 문제이다.

즉, 개발초기의 先成長·後保全의 政策은 오늘날에 와서는 문제를 더 深化시킨 결과가 되었다.

環境保全問題는 언제부터 시작한다는 시기의 문제가 아니라 그때 그때의 成長段階에서 책임져야 할 조정의 문제이다. 그렇다면 開發의 목적을 保全의 목적과 통합하여야 하는 것은 당연한 논리다.

그러나 우선적 요건에 특히 중점을 두면서 보전의 각 목적이 어느 정도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관련 변수 즉, 人口, 資源등의 실태까지 고찰하여야 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리고 開發이 주변 變數와의 융통성이 없고, 생태학적 고려에 큰 영향을 미친다면 그 開發은 결국 생태학적 손상을 초래하게 되므로 經濟的·社會的 손실을 가져 오기 쉽다.

이러한 문제를 피하는 길은 초기의 정책수립의 구상단계에서 부터 마지막 시행단계·집행 단계에 이르기 까지 보전과 개발을 통합시키는 일이다. 즉, 충분한 상관변수와 각 부문간의 상관관계를 포괄하는 정책을 채택한다는 뜻이다. 통합과정에서의 문제점은 생태학적 요인이 방해가 되는 것으로 무시해 버리거나 산업별로 그때마다 고려된다면 큰 잘못된 생각이다.

이러한 편협한 사고는 ① 개발정책의 조정이 제때에 이루어질 수 없는 점을 악이용하게 되며, ② 生産에만 집중한 결과 재생할 수 있는 자원이 손실되어 버리며 ③ 생태학적 고려가 형식에 치우칠 우려가 있으며, ④ 각 기관이 생산적·경제적인 성과를 의욕적으로 내 보이려 하게 되므로 非生産的인 公共財 즉 공기·물등의 質問題는 점점 경시하게 하는 경향으로 물고간다.

그러므로 여기서의 바람직한 環境政策이란 중대한 경제적·사회적·생태학적 사건에 단순히 대응하기 보다 지속적인 경제·사회발전을 하면

서도 生態系의 재순환을 촉진하며 환경의 危殆가 되는 제품의 生産, 판매, 폐기량등을 감소시키고, 잔여폐기물을 경제적으로 資源化하는 정책만으로는 부족하다. 즉, 그위에 人間의 건강과 복지, 생물자원 기반의 보호, 자원을 절약하는 주거양식, 운송체제, 교역 및 소비형태등을 人間中心에서 벗어나 人間과 自然과의 조화적인 全環境體系의 保全을 근본으로 하는 政策이 필요하다.

이러한 사항들은 政策決定의 초기단계에서 고려되어야 하며 人間위주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다. 이 방법에도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니다.

環境政策 自體가 既存의 政策體系에 대한 변화를 의미하게 되므로 새로운 組織의 설립 및 계획, 연구, 예방에 따르는 예산의 확보, 특정개발을 지연시키는데 드는 비용과 압력을 받게 된다는 점이다.

그러나 충분한 상관편수를 예견하지 못한 정책결정은 종종 이집트의 「하이애스완 댐」처럼 개발목적을 좌절시키고, 자원을 낭비하고 개발수행 능력을 손상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예견적인 環境政策은 이러한 되돌릴 수 없는 손실을 사전에 지켜준다는데 그 중요성이 있다.

일단 문제가 발생된 후의 개발의 보원을 서두른다는 것은 많은 예산과 때로는 완성된 사업을 송두리째 원상으로 되돌려야 하는 사태에 까지 이르게 한다.

그러므로 엄청난 외적인 경제·사회·보전상의 비용이 드는 것을 피하고 사회에 이익을 주는 環境政策은 결국은 국가전체의 이익을 가져다 주게 된다.

7. 結 論

現時點에서 經濟成長은 절대 필요하다. 그러나 環境의 質을 오염하거나 파괴하는 경제성장이 더 이상 지속된다면 반드시 우리에게 행복만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심하여야

한다.

사회비평가 Lewis Mumford는 古代 로마의 도시 폼페이 市の 住民은 現代 先進國의 주민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生活의 質을 향유하였다고 한다.

존 케인즈(John Keynes)도 그의 경제이론을 통하여 社會經濟的인 成長體制를 발전시키는 데 크게 공헌하였으나 人間은 “經濟人”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고 역설한 것은 하나 밖에 없는 지구의 물리적 한계와 人間과 自然의 二元論을 인식하였기 때문인 것이다.

그렇다면 成長體制를 前提로 한 기존의 政治經濟的 패러다임은 均衡社會를 지향하는 생태학적인 패러다임으로 柯페르니쿠스적 전환이 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生態系의 物理的 限界는 물론 社會體制的 限界도 깊이 인식하여 生態學的 次元을 우선으로 고려한 環境論理觀의 形成, 人間과 自然의 一元論의 새로운 政治理念의 모색, 새로운 환경철학의 창조, 사회체제의 변화 및 전체성을 고려한 生存戰略이 필요하다.

生態學的 政治理論은 統治機構, 公共行政, 立法行態, 司法過程등 모든 분야를 포괄하고 있다.

이제 人類의 生態學的 危穢라는 현실을 바탕으로 公共政策決定 과정에서의 실질상의 사전 환경영향평가, 개발과 보전의 통합정책 이론이 새로이 전개되어야 한다.

아직까지 대부분의 현존하는 정책체제와 제도는 성장과 풍요의 패러다임을 사회발전의 기본이념으로 형성된 것이다. 이기적인 個人의 利益과 權利中心, 무절제한 自由放任主義철학은 生態學 保護의 혁명적인 전환없이 이른바 定常狀態의 사회에 적용될 수 없다.

그러므로 앞으로의 社會는 ① 성장주의 보다는 균형성장, ② 個人主義보다는 集團主義, ③ 自由主義보다는 權威主義가 더 필요할 것이다.

生態學的 危機管理를 위한 環境問題의 解決方向은 성장일변도로 지향해 온 기존의 종래의 근대과학은 人間自然의 一次論을 지향하려는 環

境科學의 체계로 다음과 같이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기계론적, 二元論的. 自然觀은 전체론적一元論的으로, 둘째, 무한성·비순환성사상구조는 유한성·순환성으로, 셋째, 부분적·전문적·개별적 이론구조는 전체적·종합적·시스템적으로 넷째, 경쟁적·플러스 최대화 경쟁원리는 조화적·마이너스 최대화로 다섯째, 자연정복·폐기물 방출·환경문제 격화의 전개방향은 자연과의 조화·폐기물의 자원화·환경문제의 해소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이제 우리나라는 양적성장으로 부서의 “한강

의 기적”이 아니라 質的 保全으로서의 “한강의 기적”이 필요한 절박한 시점에 있다.

「오늘은 새, 내일은 인간」이라는 세계자연보전연맹의 種 保全委員會가 내건 슬로건의 경도가 우리의 좌표설정을 한번 더 여미게 한다.

환경의 質 保全을 위한 長期的 次元에서의 環境權 實現의 틀과 단기적 차원에서의 규제적·부과금등의 적용은 모두 人類의 生態學的 전환을 위한 수단들이다.

生態學的 德(Ecological virtue)를 실현하기 위한 環境政策은 보다 가치있는 人間의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 海外環境 NEWS □

美,첨단기술산업 중심지「실리콘밸리」 公害심각

종래 無公害 이미지 뒤엎어... 毒劇物배출

반도체 전자산업등 첨단기술 산업들이 무공해산업이란 주장은 사실이 아님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이런 사실은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첨단기술산업 중심지인 샌프란시스코 인근의 실리콘 밸리와 보스턴 근교의 루트 128 지역들이 첨단산업공장들이 내뿜는 독극폐기물들로 토질과 지하수 그리고 공기들이 크게 오염되어 있는 현상들로 드러나고 있다고 크리스천 사이언스 모니터가 전했다.

美환경보호청(EPA)은 이에 따라 실리콘 밸리의 오염지역 19개소에 대해 환경보호청이 제공하는 공해방지기금(슈

퍼 펀드)의 지원을 결정함으로써 첨단기술산업들의 무공해 이미지가 퇴색되기 시작했다.

환경보호청이 조사한 실리콘 밸리 지역내의 오염지역명단은 마치 실리콘 밸리의 입주업체 명단들을 실은 목록처럼 거의 모든 업체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들 업체들을 보면 IBM을 위시하여 시그네틱스社, 내셔널반도체社, 휴렛-패커드社, 인텔社, 페어차일드社, 쉐트론 테이터社등 거의 대부분이 반도체등 첨단기술산업체들이다.

이들 기업들은 무공해란 이미지를 갖고 있었으나 최근 이들 산업체들의 환경오염이 부

각되자 충격적인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반도체공장등 첨단기술산업체들의 건물은 시커먼 연기를 내뿜는 늪다란 굴뚝이 전혀 없으며 건물들이 마치 대학캠퍼스나 사무실 건물처럼 사뭇하다.

따라서 전국의 여러 지역 대표들은 첨단기술산업체 공장들을 자기 지역으로 유치, 지역 발전을 꾀하기 위해 지금까지 온갖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매력적이었던 첨단산업 공단들이 굴뚝에서 내뿜는 시커먼 연기이상으로 치명적인 독극물을 내뿜어 흡과 공기를 더럽히고 있다는 사실이 81년부터 점차 밝혀지자 대책마련이 부심하고 있다.

실리콘 밸리 지역만도 지난 81년부터 착수한 토양 및 지하수 오염방지 대책에 지금까지 7,000만달러(약 600억원)를 소비했으나 여전히 밀빠진 독에 물붓는 격으로 자금이 들어 가고 있다.

환경보전표어 및 포스터 현상공모

범국민적으로 환경보전운동을 전개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환경보전표어 및 포스터를 현상공모 하오니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아 래

응모부문	응모대상	응 모 요 령	응 모 내 용	입선작 및 상금 입선구분 상 금
표 어	제한없음	우편엽서로 1인2점 이내 (1점 16자이내)	환경보전에 관한 의식 을 고취하고 범국민적 참여를 유도하는 내용	금상: 1점 200,000 은상: 2점 각100,000
포 스텐터	제한없음	전지 1/2 전지 5도 이내	"	금상: 1점 500,000 은상: 1점 400,000

- 응 모 마 감 : 1985년 4월 30일
 - 당선작발표 : 1985년 5월 10일 (개별통지)
 - 접 수 처 : 환경보전협회 홍보부
 - 응모작은 일체 반환치 않음.
- 서울 중구 남대문로 4 가 45번지
대한상의빌딩 661호실 (753-7669)

제 3 회 환경보전사진 현상공모

환경보전을 위한 새로운 인식과 모든 국민의 참여를 촉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사진작품을 공모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

아 래

응모부문	응모대상	응 모 요 령 (규 격)	응 모 내 용	시 상 입선구분 상 금
사 진	제한없음	흑백 및 컬러사진으로 11×14이상 (필름제출 및 판별요)	환경오염실태 및 수범사 례 * 자세한 것은 본협회에 문의바람	금 상 : 1 점 500,000 은 상 : 2 점 각300,000 동 상 : 3 점 각150,000 입선작 : 40점 각 20,000 참가상 : 100점 기념품

- 응 모 마 감 : 1985년 5월 10일
 - 당선작발표 : 1985년 5월20일 (개별통지)
- 유의사항 : • 배경 및 내용은 국내에 한함.
• 작품수 제한없음.
• 작품 및 원판 첨부
• 작품뒷면에 제목, 작가이름, 주소, 성별기입
• 입선된 작품은 반환치 않음.
* 판권 본협회 귀속, 낙선작은 85. 7. 1 - 7. 10 기간에 반출해야 하며 경과시 파손, 분실에 대한 책임은 지지않음.
- 접 수 처 : 환경보전협회 홍보부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4 가 45번지
대한상의빌딩 661호 (753-7669)

사단
법인
환 경 보 전 협 회
환 경 청